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든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에 나섰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중소기업들이 받고 싶지만 받기 어려워 하는 영역으로 혹시 잘못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주고 있다.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알려준다.

컨설팅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세무조사 등으로 오작용이 드러났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주된 문외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순이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선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사업자 152만명...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 활용하면 편해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

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 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홍익표 "막대한 이익 낸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횡재세' 도입 절실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 위기와 구조화된 양극화로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높여 실질적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난방비와 고금리, 고물가로 허리가 휘때 정유회사는 15조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정유회사가 3%달하는 성과금을 지급했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얻은 올해 상반기 수익이 3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업계와 은행업계에 고통분담을 같이 해 달라"면서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결손이 난 경제위기를 초래해 놓고 긴축재정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여성, 청년 예산삭감이 아닌 증세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특히 현재 미국도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발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